

월요광장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리는 김해시에 다녀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책이 만나는 자리가 전국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니 반가운 일이다. '독서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흥미로운 주제의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래학자, 뇌과학자, 사회학자, 철학자의 시선이 궁금해 객석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뇌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독서는 최고의 두뇌 운동이고, 좋은 책은 인생을 바꾼다. 당신의 뇌도 바꾼다. 독서는 두뇌 여러 부위의 연결을 강화시켜 주는데 이 효과는 지속적이어서 노인과 치매환자들에게 기억력 감퇴를 줄여 주고 심지어 수명도 연장시켜 줄 수 있다."

책을 읽으면 우리는 이미 책 속의 상황에 들어가 책 속의 인물들처럼 세상을 느낀다. 함께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공감한다. 이런 과정이 신경세포를 자극시켜 책 속의 상황을 느끼는 데 관여하는 감각신경이 실제로 활성화된다는 것이

독서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다. 긴 이야기를 따라가는 책의 특성상 독서는 우리 뇌가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뇌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 브레인 네트워크는 독서 후에도 지속되어서 새로운 생각을 더 잘 받아들인다고 했다.

오히려 책을 가까이해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구나. 공존의 사회, 각자의 존중,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신중함 같은 것들이 독서를 통해 훈련되고 실현 가능해진다. 차이를 차별하는 대신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포용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태도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읽은 것의 결과다. 우리가 읽은 그 모든 책들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스며들어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법, 느끼는 법, 생각하는 법에 영향을 미친다."(니콜 라피에르)

한편 사회학자의 시선은 '책이라는 미디어는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나'로 향한다. 전제는 뇌과학자와 맥락을 같이했다. "정보량이 많을수록 뇌는 정보 자극에 둔감해지는데 뇌가 흡사당할 때 우리는 산만해진다. 대상이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치르는 인지적 비용은 깊은 연결적 사고를 방해받고 분절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극단적 대비를 이루는 세대별 독서 경험은 또 하나의 속제로 거론되었다. 배우고 싶어도 조건과 기회가 따라 주지 않았던, 먹고사는 일에 급급했던 노인들에게 독서에 대한 경험이 없다. 배움에 목말랐던 부모가 허리띠 졸라매고 가르친 지금 50대들은 입시와 필독서라는 타의적 책 읽기에 질려버렸다. 평생 독자가 되지 못한 한국의 50대 언어 능력이 세계 최하위라는 것은 그 반증이다. 그런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시대를 살아온 20대에게 책이라는 미디어는 낯고 매력적이지 않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책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인터넷과 독서의 균형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터넷이라는 효율적인 정보 수급과 독서라는 비효율적인 사색의 균형을 맞추도록 힘써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독서를 통해 삶의 반경이 넓어지는 경험을 사회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은 미래 사회를 향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자칫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에 화답하듯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풀뿌리 독서 운동의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참여자들의 원탁 토

론이 펼쳐졌다. 어린이가 직접 도서관 책을 고르고 추천하는 어린이 신간 평가단의 사례나, '10년 정도는 함께 읽어야지요' 성인 독서 동아리들의 성장과정,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읽는 책 모임을 통해 책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를 모색한 전국 방방곡곡의 이야기는 감동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언젠가는 밤새도록 책이란 것도 읽었지/ 너처럼 책 속에서 오랜 생각에 잠겼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짐승처럼/ 종이 속에 묻혀 조금 울기도 했지"(황병승, '그리고 계속 되는 밤'에서) 세상의 어떤 것들은 효율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데, 책이 그렇다. 세상의 신비와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밤새워 생각에 잠기고 울면서 결국 진짜 나를 만나다. 책을 통과하면서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재탄생된다. 이 또한 인간의 오랜 열망이다. 사유하는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찰, 이웃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창조적 원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읽은 책을 덮을 때 슬피 열린다. 책을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社說

백운광장 '비만 오면 물바다' 대책 마련을

국지성 호우에 물난리를 겪은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 주민들이 나흘 만에 또다시 쏟아진 큰비로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비만 오면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기는 이 일대 주민들은 비 소식만 들어도 밤잠을 설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1일 남구 일대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비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 90여 채와 도로 및 차랑이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백운광장은 차량 통행이 제한됐고 이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주월동 상가와 주택가에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이 지역은 지난 27일에도 집중 호우로 상가, 도로, 주택, 차량 등 250여 건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침수 피해는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르던 빗물이 급류를 이뤄 하수구를 통해 역류하면서 발생했다. 허리 높이까지 급격히 차오른 빗물이 상점과 주택을 덮치자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남구청의 대응도 미흡했다. 전날

부터 많은 비가 예보되자 주민들과 상인들이 침수를 막을 모래주머니라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비가 한참 쏟아진 이후에야 배달됐다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하수도 정비는 더 큰 문제다. 남구에는 두 차례 모두 시간당 6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는데, 백운광장과 주월동 일대 하수관 처리 용량은 50mm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 용량을 70mm로 늘리는 공사가 시작돼 지난해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구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면서 하수도 정비도 2년째 멈춰 서 있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는 헤아 갈수록 잦아지는 추세이지만 기상청도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방재 시설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백운광장 일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하수관 확장 공사를 서둘러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수기 전략' 광주시의회 벌써 길들여졌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현안에 대한 의결을 상당수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일부 예결위 의원들은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따지지 못한 채 사업 현황 파악에 급급한 '질 낮은 질의'에 그쳐 반축을 사기도 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시의회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투자유치 용역 예산을 모두 되살렸다. 광주형일자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해 줄 수 있다. 하지만 68%나 깎았던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예산도 예결위가 원상복구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예산은 '이미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사안인데 다시 건립 자체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는

공론화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광주시의 요구 예산 3억8000만 원 중 1억2000만 원만 반영했었다. 그러나 예결위 의원들은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따지지 못한 채 사업 현황 파악에 급급한 '질 낮은 질의'에 그쳐 반축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상임위 의결을 뒤집는 결정이 잇따르자 일부 예결위 의원들이 의결 전 해당 소관 상임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예결위가 뒤집어 버리는 것은 시의회가 스스로 상임위 활동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같은 당 소속인 이용섭 시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스스로 '거수기' 역할에 머문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다. 시의원들은 앞으로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준비된 자세로 예산 심의에 나섬으로써 다시는 자질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꿈꾸는 2040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시사평론가

조선시대 27명의 임금 중 연산군 다음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 선조이다. 그 이면에는 임진왜란에 대한 전후 대처와 파벌로 인한 봉당 정치의 폐해 그리고 정쟁(政爭)이 시작된 시기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과거제도의 인제 등용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등용했던 천거제의 활성화나 이항·이이를 포함한 수많은 인재들이 등용됐던 치적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당시 봉당 정치는 왕조시대라는 시대상으로 보면 혁신적인 정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무능한 군주, 부패한 조선이라는 프레임에 씌운 일체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되어진 면도 있다.

흔히 봉당 정치는 파벌로 인한 대립과 분열로 이해가 되어 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견제하는 비판과 대안 세

선거 제도 개편은 정치 개혁의 핵심

력으로 파벌이 형성되기도 한다. 비판 세력이 허용되지 않았던 절대 왕정에서 봉당의 출현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보여지는 정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듯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로드 액턴의 주장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언이 수백 년 전 조선에서 먼저 인지하고 실행에 옮겨졌으니 선조시대의 봉당 정치를 혁신적인 정치 형태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민주정치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본다. 당시에는 현재처럼 권력자가 선출직이 아니었기에 시기에 따라 교체되거나 물러나는 일이 없었다. 다만,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한 파벌 형성 대립이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 또한 부정적인 면보다는 왕권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상대의 실수나 실패가 다른 상대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나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정당이 나 파벌의 이익에 더 집착을 한다. 당연히 민생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싸움으

로 권력이 편향되게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은 틀리다고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 형태는 거대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는 양당제의 정치 구조로 두 정당이 득권을 향유하고 있다. 이념이나 정책적 대결보다는 상대의 실수나 실책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더구나 유럽 선진국의 정치 형태처럼 다원화된 사회에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존재하기 보다는, 포괄 정당으로 선거 때만 사회 제반 모든 정책 장애인 여성 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까지 포함시키지만 선거 이후에는 재벌을 포함한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윤배반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의 정치 형태는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구성돼 있다.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이 넘지 못하는 형태이다. 선거 제도 역시 소선거구제 하에서 1위를 한 후보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제에서 정당의 의석수와 그 정당이 득표할 득표율이 반영이 되는 비례 대표제 형태이다. 정치개혁에서 가장 신뢰한다는 법치중 하나가 '뒤베르제의 법칙'인데 이 법칙에 따르면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낳고 비례

대표제는 다당제를 낳는다는 법칙이다.

현재의 거대 양당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뒤베르제 법칙처럼 우리나라도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해 비례 대표제 다당제로 가야만 한다. 다당제는 기본적으로 협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연립 정부 형태이다. 협치는 집권당인 여당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 즉 여당의 책무다. 진보와 중도가 보수 세력에 맞서 협치와 연정을 통해 국정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촛불 광장의 적폐 청산은 대통령 권력만 바뀌었지 의회 권력은 그대로다. 말 그대로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로까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의회 권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무늬만 다당제가 분열과 분화로 이루어진 만큼 연대는 양당제로 회귀할 수 있고, 한국 정치는 끊임 없는 분열과 대립 구조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열과 대립 구조는 현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좋지만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배제의 정치로 정치 혐오만 불러 일으킨다.

기고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퇴근길, 도시의 저녁이 밤으로 가고 있을 때, 좁은 길 쪽으로 꺾어들자 풀벌레 울음소리가 예전에 비해 자못 우렁찼다. 어찌 저리 됐나? 물론 생식(生齧) 때문이겠지.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에 딱딱 짝을 찾지 못할까 걱정되어 스스로 볼륨을 키운 거겠지. 그렇다면 풀벌레한테는 죄가 없다. 사람이 우쭐다. 저 무고한 풀벌레들을 사람이 고장 나게 한 것이다.

도시의 밤, 그 밤으로 가면 달도 별도 성치 않다. 아파트 같이 건물들에 가려 좁게 달구경하기도 힘들고, 사람이 만든 전깃불에 치여 달빛도 선명다. 별은 또 어떤가. 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 너무 나간 걸까. 고개를 있는 대로 젖혀 올려다보아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오는 그런 별은 만나기 어려운데 도시의 밤이다.

풀벌레와 달과 별, 그런 고장 말고도 광주는 고장을 하나 더 갖고 있다. 5·18에 커다란 장미가 났다는 얘기가. 한데 그

고장 난 5·18, 고장 난 손으론 못 고친다

'광주의 고장'을 가장 명쾌하게 분석해 놓은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면 사람들은 언뜻 언뜻 방방할 것이다. 전두환이 제 손에 광주의 피를 묻히지 않았다며 떼쓰기 위해 '전두환 회고록' 1권(377-542쪽, 2017년 발간)에 끼워넣은 76개의 인용문이 그것이다. 거참, 그게 뭣인가.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때의 계엄군 쪽 진술과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 및 공판 기록 등에서 따온 것들 일색이라는 데 광주의 탄식이 머문다. 물론 자신의 주장을 튼튼하게 받쳐 주는 발참들로, 혹은 '허위 사실'을 '사실'로 둔갑시키기 위해 자기한테 유리한 대립만 끌어다 썼다.

그 '광주의 고장'을 고치기 위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9월 14일 뜻을 달게 된다. '진상조사위원(9명) 구성에 고장이 생기면 진상 조사가 고장 난다'는 것쯤이야 조사 위원을 추천하는 정치권 쪽이 더 잘 유념하고 있을 터. 하지만 제발이지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뽑아 달라는 '소원성 권유'를 '불손한 주문'으로 꺾어 듣지는 마시길 간망한다. 이를테면 진상 조사란 것이 광주의 '침'과 신군부의 '거짓' 대결이란 점에서 볼 때 5·18 공부가 될 되어 있을 경우 질 낮은 궤변마저 넘어서지 못할 것이므로, 가

급적이면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는 진언이다.

자신은 5·18과 무관하며더 노상 입에서 뱉 나올 소리만 주위섬기는 전두환과 전두환 그룹 쪽이 속이고, 감추고, 공작하고, 조작하고, 거짓 선전하기를 그 몇 해이던가. 자그마치 38년이다. 열정 없인 고장 난 5·18을 고칠 수 없다는 열정을 그래서 놓을 수 없다. 그 열정의 본보기를 들라면, 작년 9월 10일부터 올 2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국방부 5·18특별조사 위원회에서 일한 어느 변호사가 1순위로 떠오른다. 조사위원이 되면서 그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아예 닫아 버리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특조위 회의가 매주 두 번씩 열렸지만, 위원 가운데 그이만 홀로 그것도 추석날 하루만 빼고 날마다 국방부에 나타나 새로 발굴한 군 기록을 탐독하기도 했다. 하지 않은가. 때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가며 밥이 이속하도록 '정집' 난쟁을 벌였고, 자꾸만 외로 가는 조사관 2명을 아웃시키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원장, 그 자리를 누가 맡는냐에 따라 진상 조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걸 광주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진상 조사의 총사령관인 위원장이 조사의 기본 방향을 잡고, 조사의 핵심 목

록(리스트)을 짚어 주며, 조사 목록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까닭이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산으로 가는 배를 바다로 끌고내리는 지략도, '기다, 아니다 논쟁' 때 난관을 헤쳐 나가는 돌파력 등도 위원장 몫이라는 얘기가.

그게 무슨 일이트 그 일을 파악하는 사람의 각도(생각의 방향이나 관점)가 중(重)하다 함은 그 각도에 따라 물이 불이 될 만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 5·18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파란 안경을 끼면 5·18이 파랑계, 노란 안경을 끼면 5·18이 노랑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장 및 위원 추천의 '최고 기준'을 '각도'에 뒤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상 조사 목록 가운데 '몸통'이 무엇이고 '깃털'이 무엇인지 가려낼 안목이 없다면 그 또한 '추천감'으로 부적절하다는 게 광주의 목소리다.

위원장 자리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그 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다. 조선 왕조의 '사관정신'(史官精神)을 갖춘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다. 막중함이 그러하니, 글의 제목으로 '고장 난 5·18, 고장 난 손으론 못 고친다'고 내놓았다. 고장 난 손들이 아니라 5·18의 '진실'을 완성할 수 있다.

無 等 鼓

울화로 입적 8주기를 맞은 법정 스님(1932~2010)은 '청빈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스님이 설파했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삶'을 의미했다.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17년간 정진했던 그는 수행자로서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던 큰 스승이었다. 법정이 주장했던 무소유는 한마디로 '맑은 가난'이다.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제하고 여건에 자족할 줄 아는 의 윤곽은 후보 등극이 시작되는 4일 이후에야 드러날 모양인데, 불교 개혁행동과 총무원장직 선제를 요구하는 측은 종단 적폐 청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시민들은 일련의 조계종 사태를 보며 '이게 종교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때 법정 스님의 '연잉의 지혜'를 되새겨 본다.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받아들이면 마침내 일이 찢기거나 줄기가 꺾이고 말 것이다. 세상 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총무원장 임기는 4년이지만 이번 선거는 '은처자 의혹' 등으로 설정 스님이 사임하면서 조기에 치러진다. 총무원장이 재1년도 지나지 않아 중도 하차한 것은 세간의 의혹 탓도 있지만, 종단 내 주류와 비주류의 권력 다툼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총무원장 선거는 불교계 '대선'이라고 들 한다. 총무원장의 권한이 주지 임명권과 예산 집행권 등 시간으로 치면 대통령에 버금갈 정도이기 때문이다. 임직자들이 슬피다. '연잉의 지혜'의 윤곽은 후보 등극이 시작되는 4일 이후에야 드러날 모양인데, 불교 개혁행동과 총무원장직 선제를 요구하는 측은 종단 적폐 청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시민들은 일련의 조계종 사태를 보며 '이게 종교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때 법정 스님의 '연잉의 지혜'를 되새겨 본다.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받아들이면 마침내 일이 찢기거나 줄기가 꺾이고 말 것이다. 세상 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당)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독송 발행(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FAX 222-0195)	(FAX 222-0195)
정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222-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납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